

‘불법 수입중고복사기’의 현황 및 문제점



송지환
한국전기제품안전협회

복사기 시장의 발전 및 문제점 대두

현대 사회에서 복사기, 프린터, 스캐너 등 사무기기는 생활필수품이라고 해도 무리가 없을 정도로 많이 사용되고 있다. 일반 사무실, 학교, 도서관 등 사용인원과 장소가 늘어남에 따라 기능은 더욱 발전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많은 종류의 사무기기가 개발·보급되고 있다. 특히 대량 및 고속의 업무에 사용되는 사무기기는 업무의 효율을 극대화 시키는 등 급격하게 변화하는 사무환경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사용자들의 만족을 이끌어냄으로서 매년 판매량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와 같이 사무기기 제조업체들은 단순히 제품 판매에 그치지 않고 끊임없는 아이템개발을 통하여 발전해가고 있으나, 그 이면에는 해결하기 힘든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다.



국내 시장에 불법 수입중고복사기가 대량으로 유통되는 문제가 발생된 것이다. 사무용 디지털복합기의 시장경제적 특성(원제조제품의 높은 가격)과 현 안전관리제도를 악용한 불법 수입중고복사기들이 시장을 잠식하여 복사기시장을 흔들고 있다. 수입업자는 해외에서 이미 소비자에 의해 사용된 중고복사기를 수입하여 부품교체 등의 구조를 변경하여 판매하고 있지만 그에 따른 안전성 재검증이 없이 유통되어 낮은 가격으로 판매, 일정기간동안 대어하고 있었다.

수입중고복사기 가격은 신제품의 25~40% 수준의 저렴한 가격으로 형성되어 있으며, 이들 중 안전관리제도를 위반하는 불법중고복사기업체들이 빠르게 증가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2005년 10월 한국전기제품안전협회에서 상습적인 불법중고복사기의 수입업체들에 대해 집중조사 등 다양한 방법을 이용하여 불법업체 근절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아직도 복사기 업체들의 불만의 소리는 끊이지 않고 있다.

복사기 업계의 한마디

재제조제품을 활성화시킴으로서 현대에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는 자원절약과 소비자의 안전을 위해 정부는 안전검사제도를 도입하였으나, 불법 중고복사기의 유통은 줄어들고 있지않아 협회와 사법기관을 동원하여 불법 수입중고복사기업체들을 근절시키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지만 현재까지 상존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복사기 업계의 의견은 다음과 같다.

“재제조에 관한 이해부족과 정부의 무리한 육성정책으로 원제조업체와 재제조업체간 첨예한 대립 양상과 함께 각종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더욱이 근래에는 정품을 모방한 값싼 중국제품까지 시장에 밀려들어와 재제조업체까지 피해를 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문제는 재제조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신제품과 같은 고른 품질을 기대할 수 없고 사후관리와 단속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 불법행위의 사각지대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조업체와 재제조업체간 서로의 기득권을 주장하기에 앞서 지구의 환경보호·자원절약·소비자 보호 차원으로 관점을 변화해야 하며, 정부도 중고품 재제조에 대한 기준과 제도를 명확히 하여 향후 재제조 산업육성에 기틀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 복사기 제조업체 관계자 -

불법중고복사기로 인한 피해가 줄어들지 않는 원인에 대해 단순히 사후관리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것만이 아닌 현 제도에 큰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었으며, 이에 따라 일방향적인 문제 해결만으로는 그 어려움은 계속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었다.

불법 수입중고복사기의 유통 사례

첫째, 단순히 중고복사기를 수입한 후 안전검사를 받지 않고 시중에 유통시키는 사례가 있으며, 둘째, 업계에서 가장 큰 문제로 말하고 있는 재제조제품이 원제조제품이 취득하는 ‘안전인증’을 획득한 채 유통되고 있는 사례가 있다.

안전검사의 경우 매번 수입시 안전성에 대해 검사를 받아야 하지만, 안전인증은 한번 인증을 받으면 같은 모델의 경우 국내 통관시에 추가적인 검사가 없이 통관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하여, 중국에 재제조 공장을 준비하고 해외각국에서 수집한 중고복사기를 분해, 조립한 후 마치 ‘안전인증’을 취득한 새 제품인 것처럼 국내에 유통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만약 이미 국내에 유통되어 사용 중인 제품을 확인



▲ 불법중고복사기의 재제조 현장

하였을 경우 현행법상의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될 수 있다. 하지만 폐기처리되기 전의 중고복사기의 부품들을 재제조하여 안전성의 재검증 없이 시중에 유통시킴으로서 소비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것이 문제시 되고 있다. 한편 한국전기제품안전협회에 단속된 한 유통업자는 “우리도 소비자의 안전을 위해서 새 제품과 똑같이 재제조하여 판매하고 있으며 저가로 판매하여 모든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라고 말하며 법을 위반한 것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만 복사기시장의 문제는 시장단속만으로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불법 수입중고복사기 단속현황

불법 수입중고복사기로 인한 문제는 2000년도 초부터 제기 되었지만 한국전기제품안전협회가 2005년 10월부터 불법제품 조사 및 확인 업무를 수행함에 따라 본격적으로 대두되기 시작하였다. 2006년부터 현재 까지 총 161업체를 조사하였으며 그 중 62업체를 사법기관 고발조치 및 행정조치의뢰 하는 등 불법 수입중고 복사기 근절을 위한 집중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표 1〉 불법복사기 업종별 현황

구 분	2006		2007		2008	
	조 사	단 속	조 사	단 속	조 사	단 속
수 입	40	25	75	12	19	13
판 매	3	3	5	2	12	7
사용자	-	-	2	-	5	-
합 계	43	28	82	14	36	20

2006년과 2007년에는 수입통관자료와 복사기업계측의 정보를 활용하여 수입업체들의 실태를 파악하고 협회 자체적인 조사계획을 수립한 후 단속을 실시하였으며, 수차례의 단속에도 불구하고 끊이지 않는 불법 수입중고복사기의 시중유통을 막기위해 2008년도에는 지방경찰청과의 합동조사를 실시하였다.



▲ 다량으로 불법 중고복사기를 수입한 업체가 적발되었다.

문제해결을 위한 노력

금년에는 상습적으로 안전검사제도를 위반하는 중고복사기 수입업체에 대하여 지자체와 한국전기제품안전협회가 합동단속을 실시하여, 판매를 목적으로 진열 및 보관하고 있는 업체들까지 사후관리 대상으로 선정, 집중 모니터링 및 조사를 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법 수입중고복사기 유통을 근본적으로 근절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남아있다.

복사기업체들이 말하는 제도의 허점과 중고복사기업체들이 말하는 사회적 어려움 등, 이 모두가 국가의 발전과 건전한 시장환경을 위해 반드시 해결되어야 하는 일임은 분명하며, 각 주체의 이해관계를 떠나 소비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중대한 사안인 만큼 제도적 보완과 업계의 불법제품 근절을 위한 노력, 협회의 철저한 시장감시 및 사후관리가 투명하고 적극적으로 이루어져 하루 빨리 문제의 해답을 찾아야 할 것이다.